

# 최영규 “학교폭력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 학교밖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자 증가 추세... 위기 학생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책 찾아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 40%가 학교 울타리 내에서 벗어난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도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들의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익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2012년 2,055명(8.6%)에서 지난해 5,125명(40%)으로 4년동안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북도내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절한 교육과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도내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은 지난 2014년 초 282명, 중 308명, 고 943명 총 1,533명에서 지난해 초 243명, 중 244명, 고 854명 총 1,341명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도내 전체 학생수가 이보다 많은 1만7,000여 명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현상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매년 100명이 넘는 수준으로 끊이지 않아 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내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범죄는 3,800여 건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7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돼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업중단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가정과 사회적 요인으로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섰다.

특히, 도내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들이 보호받고 관리받아야 함에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상담 등의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최영규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전라북도 가 이들이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밖 청소년의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책을 찾아야 하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업중단자 발생 시 도와 도교육청 연계를 강화해 학교로 복귀할 경우 학교적응 지원 등 위기학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2회 추경 예산안 의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허남주 위원(비례)은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가사실습 현대화사업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 시설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 및 산출기초, 대상 학교 등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을 지적하고 추경에 반영할 시급한 사안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이번 추경에 체육관건립,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70%넘게 반영되었다며, 예산반영 기준 및 우선 순위 선정에 철자를 기해 줄 것과 함께, 학생의 학력 신장의 문제 있어서 교육청과 도민들과의 학력 신장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서로 다른 만큼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당부했다.

최명철 위원(전주4)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갈수록 어려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We)센터의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학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담인력 확보 등 전북교육청 차원의 학교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 및 노력을 당부했다.

정호은 위원(전주9)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15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와 상호 매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사업비로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일 위원장(순창)은 이번 교육청 제2회추경 예산심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61억 원이 증액된 이번 전라북도 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3조 1,801억 원 가운데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공사비 90억원 중 토지매입비 13억원을 삭감한 3조 1,788억 원으로 조정을 가결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김이수 부결’ 격앙... 對野 강경노선 시사

### 권력형 취업비리 청탁·공영방송 국정조사 카드 제언... 국민의당 관계 설정 필요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對)野 강경노선 전환을 시사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권력형 취업비리 청탁 관련 국정조사 및 검찰 재조사 ▲지난 10년간 공영방송(KBS·MBC) 국정조사 카드가 제언됐다.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의당발 호남 확대론에 맞서는 모양새도 보였다.

강홍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박근혜 권력형 취업비리 청탁 관련 국정조사 및 검찰 재조사 요청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에서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KBS·MBC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지는 제안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과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이대로 가는 것이 맞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성토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추미에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부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분노의 마음을 표현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자유발언은 부결이 민주세력에 상처를 준 사건이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였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 반박했다.

그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 박성진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탁현민 행정관을 정리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안사청문회도 안 끝났고 두 분은 대통령 인사권인데 그렇게 해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하기로 하고 그 시간까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낙마시켰다고 하는 것은 선배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상임위서 입장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앞서 긴급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거취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자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의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은 안했다”며 “오후에 간사협의 전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1

### 한국당,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 보내

자유한국당 소속 74명의 의원들이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핵포럼 회원과 한국당 의원 등 총 74명이 서명해 금일 중의 교부서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 안보불안감의 원인은 북한이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독점(Nuclear Monopoly)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의 고도화에 대해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검찰 ‘MB 블랙리스트’ 주축... 적폐청산 1호 될듯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후속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국정원 수사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는 ‘적폐청산 1호’ 수사가 될 것인 관측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아직(국정원으로부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담당부서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적폐청산TF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과 MB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권고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이희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재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해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파방송 PD주요 제작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라고 수시로 지시했다. /뉴스1

**2017 임실치즈축제**  
10.6(금)~9(월)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일원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